

# [단독] 윤석열·이성윤 회동...靑하명·선거개입 수사 논의

기사입력 2020-01-22 20:23 최종수정 2020-01-22 23:3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기소대상·수사일정 논의한듯  
이성윤, 수사팀 간부들과 식사

文정권 수사팀 와해 우려속  
檢, 연일 송병기 피의자 조사

법무부 "공판상황 인사때 감안"



윤석열 총장



이성윤 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이 22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 등 핵심 수사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쟁점 수사 현안에 대해 공식 면담에서 논의한 것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13일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검찰 간부들에 따르면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총장 집무실에서 면담했다. 면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주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였지만 통상적인 업무보고 이상으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맡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관련 향후 수사 일정과 기소 범위, 기소 대상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는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수사 부서와 인력 재편 등으로 사실상 수사 동력은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청와대가 송 시장 선거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주고, 야당 유력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부임한 후 관련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수사 일정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주요 피의자들 가운데 기소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고발됐다. 그는 면담에 앞서 수사팀을 지휘하는 김태은 부장검사(48·31기)가 포함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부장들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전날에 이어 송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3일엔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한다. 박 전 비서실장은 이날 "23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 신분으로 울산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현 정권 의혹 수사팀들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공수사 제2부와 반부패수사 제2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한 수사과 기소를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50·29기), 송경호 3차장(50·29기),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47·28기) 등 수사팀을 지휘하는 차장검사들은 전원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인사의 목적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을 교체하려는 것이라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실무를 맡은 부장검사들도 교체될 수 있다.

법무부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후에는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현안 사건 상황 등도 인사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8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 등 정권 대상 수사 관련 대검 지휘부를 전원 교체했다.

[류영욱 기자 / 성승훈 기자]

▶기사공유하고 코인적립하세요 'M코인'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